

'2000명' 못 박은尹대통령...교수들 "무의미"

“변수 없다면 의정 갈등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

“증원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 기다릴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의정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갈등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10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정부가 고수하는 상황에서 의정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 등 기존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임 당선인은 최근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조건없는 대화’ 참여 요구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과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제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

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전날 비대위 회의 후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초지일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라고 거듭 밝혔다.

의대증원의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체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전국대의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의대증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A 등급의

학과 교수는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전공의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인데, 이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B 교수는 “오늘 담화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그동안 해왔던 말을 대통령이 대신 반복한 것으로, 협상은 할 수 있어도 2000명 증원 방침은 확고하다는 전혀 의미없는 내용”이라면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전의교협 회장은 “저희는 현재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본안 소송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전남 총선 유권자 184명 선상투표 한다

2~5일 나흘간 진행... 전국 선상투표자의 8.9%

전남 지역 유권자 184명이 제22대 총선 선상투표에 참여한다.

1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선상투표에 전국적으로 2050명, 전남에서는 184명(전체의 8.9%)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왕어선 등 308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이 대상이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첫 도입된 제도로, 대선과 입

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인 2821명 중 2586명이 투표해 91.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박별 선상투표 일시와 장소는 선상투표 기간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이 입회인으로 참가한다. /김호기자

사전 투표소 몰카에

투·개표소 보안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보안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투·개표소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 투·개표소 예정장소 시설 관리 주체에 출입 통제 등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오는 4일과 투표소 설치 전날인 9일에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투표소내 모든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투표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한해 투표참관인이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이나 투표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모든 투·개표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고, 사전투표자수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전투표할 보관상황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 “순천은 편안한

곳,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

“순천 와서 짝장 놀랐습니다. 예전 야생 그대로였다면 10년이 지나 다시 외눈 정원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1일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개막식 축하인사를 통해 “순천시의 미래 모습은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전날 밤 순천만국가정원을 한 시간 넘게 산책하면서 편안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새벽에도 정원의 모습을 다 둘러보고 개막식을 지켜보는 이 순간에도 순천의 미래에 궁금증과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어딜 가도 사람들이 화가 차 있지만, 이곳 순천에서는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정원의 모습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순천은 앞으로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노 시장의 말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힌다”고 말했다.



약수하는 이재명·원희룡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턴계약을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야권, 윤 담화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불통 정부” 맹비난

민주 “2000명 숫자에 매몰... 불통 정권 모습 그대로”

정의당 “공론화위 구성해야” 조국당 “의사 피의자로 보나”

이준석 “현실 인식에 개탄” 이낙연 “해결 의지 없는 일방통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2000명 숫자에만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강서 보결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의료계 반발이 뻗어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돌아섰다.

그러면서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환자와 병원노동자,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들은 즉시 현장에 복귀해 끝까지 없는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국민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 통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고 탄식했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피의자로 보느냐”고 몰아세웠다.

김미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지역 카르텔’로 보고 있다. 상대를 저런 방식으로 대하면 대화나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미래 광주 광산을 후보인 이낙연 공동대표는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라며 “의대 증원 2000명 고집과 변명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부산 사상구 배재정 깜짝 지원...김정숙 여사도 동행

파란색 점퍼 차림으로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격려했다.

배 후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 사상구 폐법동에 있는 낙동강 뱃길길을 찾았다.

파란색 점퍼와 청바지 차림의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1시간30분 동안 뱃길길을 걸으며 시민들에게 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배 후보에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았다”며 “건강 잘 챙기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고 배 후보는 전했다.

이후 대통령 재임 시절 방문했던 사상구 한 재첩국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1시반쯤 평산마을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19대 총선에서 부

산 사상구에서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선 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4일 경남 양산갑 이재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바 있고, 27일 거제 변광용 후보를 만나 산행을 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사상구를 방문한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상구 폐법동 애플아렛에서 김대식 후보 유세를 펼쳤다.

광주시 산하기관 예산편성 ‘주먹구구식’

시의회 지적...특별위 전문위원실 예산안 검토

광주시 산하기관 19곳 중 일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련 조례를 지키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24년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연구원 등 지난해 12월 재적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광주연구원 정관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적이사 12명의 과반은 7명으로 6명이 참석해 의결한 예산안은 원천무효라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은 서면심의만으로 1년 예산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광주시 산하기관별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 데다 수당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 단가가 무려 1960만원부터 10만원 까지고, ICT·SW 지원분야의 상시전문가 멘토링 수당은 1명이 1회당 30만원씩 총 540회에 걸쳐 1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또 광주연구원 등 일부 산하기관은 조례에 따라 올해 예산부터 출연금을 정산한 후 광주시로 반납해야 하지만 자체 세입으로 편성했다.

이정기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지난해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후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산출근거를 고민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며 “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방송토론 직전 불참’ 광주 서구갑 조인철 사과

“이유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죄송”

건강상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법정 방송토론회에 불참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가 1일 사과했다.

이날 병원에서 퇴원한 조 후보는 주관 방송사인 KBS광주방송총국에 들려 불참 경위를 설명한 뒤 광주시의회 기자회견도 방관해 “피로가 누적돼 병원에 입원했다. 이유 불문하고 선거방송토론에 불참한 것은 할 말이 없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 우세 지역의 후보들 가운데 토론에 불참하는 일이 있었는데 좋지 않다. 우세 지역 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며 조 후보를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지역 첫 선

거 방송토론인 서구갑 토론회가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작 1시간 30여분 전에 조 후보는 “몸에 열이 나오지 않는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결국 토론회는 하현식 국민의힘 후보자와 진행자의 대담 형식으로 바뀌고, 방송시간도 1시간10분로 지연되는 등 파장을 빚었다.

하 후보와 강승철 진보당 후보 등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이자, 조 후보에게 솔직한 주시각자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도기 기자



윤희숙 “광주서 기적의 1석 만들어달라”

진보당 대표, 복구를 윤민호 유세 지원 총력

차별화된 선거전략으로 새로운 진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가 1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에서 ‘기적의 1석’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5석 이상 당선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대표 진보정당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복구를 윤민호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진보당은 고심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고 지역구에서는 64명의 후보가 응모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진보의 바람을 광주에서도 만들어 달라.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

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미 부산에서는 노정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진보정치 1번지 울산에서는 윤종오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와 1대 1 구도도 경쟁하고 있다”며 “광주 8석 중 딱 1석, 복구를 윤민호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윤민호 후보는 복구를 여는 시민과 사회적 약자 편에서 왔다”며 “광주 진보당 1석은 노동자를 살리고,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살리는 1석 3조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